

특별기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나라의 얼굴

이희재·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얼마 전 얼핏 흘러나오는 뉴스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민영화〉라는 소리를 듣고 하도 상식 밖의 일이라서 웃으며 지나쳐 버린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며칠 후 그것이 그냥 그렇게 흘러버릴 일만은 아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볼 일이 있어 들렸던 도서관협회로부터 알게 되었다.

요컨대 기획예산위원회가 “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방침”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문화기관의 민간이양 및 용역 전환 검토 96개 사업에 끼워넣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왈가왈부 떠들어 일을 확대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다. 〈상식밖〉이고 〈절마 이런 무지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내게는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발상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은 분명 잡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식의 선에서 정책 담당자의 주의를 상기시키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에서 굳이 어려운 국내의 정책이나 법, 그리고 외국 학자들의 이론까지 내세우지는 않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진대국, 문화대국의 바탕에는 고도로 발달한 도서관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대학의 심장이 대학의 도서관이라고 하듯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국가의 선진 또는 문화 수준은 그 국가의 도서관 문화와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이다. 르네상스의 모델이 되는 고대 회람의 찬란한 문화의 바탕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고 우리가 흔히 암흑시대로 일컫는 중세의 서구에는 지극히 제한되고 영세한 수도원 도서관만이 존재했다. 중세 후반 암흑시대로부터의 탈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설립은 그 후 세계 문화의 선도자적 입장이 된 서구세계에서 지금까지도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의 왕실도서관, 귀족도서관들은 시민혁명 이후의 국공립 도서관으로의 발전 수순을 정확히 밟고 있었다.

멀리 가지도 말자. 오늘날의 선진대국들이 정치 경제만으로 대국을 이룬 줄 아는가. 그 원천적인 힘은 수도는 물론 작은 행정구역 단위에 이르기까지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문화기관에 쏟는 국가적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앙드레 말로가 문화상이 된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로 치면 각 도 단위의 행정구역에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의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그 때도 물론 세계적인 모델이 되는 빠리국립도서관 이하 전국 방방곡곡의 공공도서관까지 모두가 전 국민의 문화공간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는 전쟁 후의 복구 작업으로 그다지 경제도 좋지 않은 50년대였던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바로 선진국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 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문화기관의 민영화 또는 위탁운영을 기획하게 된 것이라고, 채택되어 있고 비능률적이며 비효율적인 공무원 또는 공영기관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국립도서관이 민간이양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국가의 도서관이 아닌 민간도서관, 또는 개인도서관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대미문의 훌륭한 도서관으로 발전된다한들 그것은 사립도서관일 뿐, 세계에서 국립 도서관 하나를 갖지 못한 유일한 국가,

그래서 문화적 후진국이라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의 이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볼 때 도서관은 개인의 것이라 해도 그 속성상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공영화가 되어왔다. 그러니 공영에서 민영화는 시대를 거꾸로 간다기 보다 시대의 흐름을 역으로 되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나라 전체가 오직 정치,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되게 나가는 바람에 그 서술에 주눅이 들어 별로 표현도 못한 채, 오늘날의 선진국의 도서관과 우리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속앓이를 해왔다. 그리고 지난 날 선진국 못지 않은 도서관 문화를 영위해오기도 국립도서관의 설립을 해방된 해로 규정해 그 역사를 겨우 반세기로 잡는 이 잘못된 풍토에 심사가 뒤틀리던 판이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시민혁명 이후 전 지역에 확산된 국립도서관 설립의 전신을 르네상스 이후 프랑소아 1세가 틀을 다지기 시작한 왕립도서관으로 보고 있다. 학술원의 성격이 짙었던 세종조의 집현전까지는 그만두더라도 명실공히 훌륭한 왕실도서관 전용의 정조의 규장각을 우리나라 국립도서관의 설립으로 잡아야 할 것 아닌가. 계몽주의 합리주의 시대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국립도서관 자체의 명칭을 왕실도서관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들은 몇 백년의 국립도서관의 역사를 갖게된 것이다.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도서관을 갖고 있었다.

개혁하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기에 잘못된 우리의 문화 역사를 바로잡아야겠다고 버르던 판에 느닷없는 정부의 방침에 어안이 빙빙할 뿐이다. 아직도 우리의 문화는 정치, 경제원리에 부속되는가. 정치, 경제의 잣대 위주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무엇인가. 인간성도 상실된 채 숨가쁘게 뛰고도 제자리가 아닌가.

급할수록 주위를 살펴야 하고 기초를 닦아 힘을 길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문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지난 날 돈 한푼에 쏟는 열정에 10분의 1만 문화에 할애했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 한도 내에서 쪼개서 쓰면 되고 100원을 1000원처럼 쓰는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다시 지난날과 같은 정치 경제 일변도의 우를 범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동남아 국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에 하고픈 말이 있다. 이와 같은 터무니 없는 발상이 탄생하게된 절반 이상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우리의 자리매김에도 실패했다. 그러니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비전의 제시는 정보화의 소리만 요란할 뿐 공염불같은 실정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감과 철학을 투철하게 가져야 할 것이며 지식과 문화의 관리자로서의 실력을 배양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